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219-06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9

공급망 관리와 청렴윤리경영

2024 September | Vol. 141

공급망 실사와 비즈니스 윤리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김민균 교수

공급망 관리 우수 사례

글로벌 공급망의 청렴성 강화

공급망 속 기업의 ESG 경영 체크리스트

일에도 존엄성이 필요한가
영화 '다음 소희'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4년 9월 1일(매월발행, 통권 141호, 비매품) 발행인: 유철환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구독신청: 044-200-7163
주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민간협력담당관실

110
정부민원안내
부패·공익신고

COVER STORY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에 대한 실사를 이행 후 공시하는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이 2024년 5월 24일 EU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7월 25일에 발효되었다. 앞으로 3년간 계도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역내외 기업에 순차 적용되며, 인권을 침해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킨 기업은 매출에 비례해 과징금을 물게 된다. 이러한 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ESG경쟁력이 수주 경쟁력이 되고 있으므로 중소·해외 협력업체가 많은 한국 기업의 특성상 이에 대한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급망 실사에서 인권과 환경분야가 가장 주요하게 검토되나, 거버넌스(반부패) 분야는 해당 분야의 관리의 효율성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공급망 실사 동향 및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그 속에서 청렴윤리경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01 **전문가 코칭** 04
공급망 실사와 비즈니스 윤리 |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김민균 교수

02 **사례돋보기** 08
공급망 관리 우수 사례

03 **보고서리뷰** 14
글로벌 공급망의 청렴성 강화
Alliance for Integrity, Fostering Integrity in Global Supply Chains (2023.07)

04 **행동하는 윤리경영** 18
공급망 속 기업의 ESG 경영 체크리스트

05 **문화 속 기업윤리** 22
일에도 존엄성이 필요한가 | '다음 소희'

06 **뉴스클립** 23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동향
국내외 동향

07 **웹툰 윤리네컷** 26
공급망 매핑

08 **행사소식** 27

09 **독자 의견** 28

공급망 실사와 비지니스 윤리

전문가 코칭

김민균 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이번 호에서는 서강대학교 경영학과의 김민균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실사 동향과 기업의 비즈니스 윤리에 대한 고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Q1〉 EU 공급망 실사법이 발효되는 등 공급망 관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유럽에서 생산 거점을 마련하고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공급망 관리에서 ESG 요소들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하는 부분은 ESG 위해 요소들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공급망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입니다. 공급망에 속해 있는 공급업체, 제조업체, 물류업체, 판매업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내·외부 환경을 분석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지 인지하고, 위험요소 감소 방안과 매뉴얼을 마련하여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공급망 지연 또는 붕괴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또한 공급망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제품, 정보, 자금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공급망 위험관리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급망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공시 정보 수집 및 3자 인증 노력이 필요합니다. ESG 공시 정보의 정확성, 그리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공급망 내의 협업 프로세스 구축과 운영,

3자의 적극적인 역할 등도 전략적인 정보 공시 전략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정보 정확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급망 내에서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정보 교차 확인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고 협업 프로세스 내에서도 시스템 내에서의 정보 오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공급망 기업들을 연계하는 통합적 시스템에서 프로세스, 분석, 대응, 3자 인증 등 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한 디지털 공급망 구축과 운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함으로 인해 공급망의 투명성과 자동화, 그리고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실질적 반영을 구현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급망 관리에서 ESG 규제가 강해질수록 국내 기업은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급망 내 협력업체들과 정보 공유 및 소통 강화를 통한 협업을 통해 탄소세 및 탄소 중립을 위한 탄소 감축 전략 수립,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활용, ESG 관련 새로운 사업 기회 및 시장 발굴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공급망 전체에서 이끌어내는 방안과 노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ESG의 강화가 공급망에서 제약이 아닌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새로운 기회로 이끌어 공급망 내에서의 다각화 협업을 이끌어 내고 이는 공급망 ESG 생태계의 합리적인 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Q2〉 기업이 발생할 수 있는 공익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제보, 내부고발시스템 등을 운영할 때 제도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글로벌 공급망 관리를 위해 기업이 공급망 투명성을 구현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안이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흐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고객에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입니다.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고객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파악하여 글로벌 공급망 구조를 그려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구조를 그려낸다고 하면 어느 나라에 위치한 어떤 기업이 반도체 소재 중의 하나인 반도체용 패키지 기판 생산을 하는지 등을 파악해 삼성전자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구조 그림에 채워 넣게 됩니다. 복잡화된 글로벌 공급망의 모든 과정들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스텝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모든 과정들, 제품의 원산지, 생산지와 생산방식 등에 대한 정보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내부 지식이라는 우려도 있겠지만, 제품 흐름에 관한 정보는 글로벌 공급망의 이해관계자들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와 정부 등도 공급망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채널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민감한 정보와 데이터는 공급망 내에서도 공유가 어려울 수 있지만, 제품 라벨링, 포장, 원산지, 재료 소스, 지속가능보고서 등 기업이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투명성 뿐만 아니라 마케팅 소재, 또한 ESG에 충실한 기업 이미지 개선을 통해서 오히려 소비자에게 그 투명성을 호소하면서 긍정적인 면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품이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 공급망 투명성을 구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품이 이동하는 과정 즉 물류 과정에서 기술 활용을 통해서 제품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로 있는지 추적 관리가 가능하게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그리고 계속 발전되는 기술 중에 하나인 사물인터넷 기술 구현의 하나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고유 코드를 이용하여 제품의 위치, 이력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제품의 추적이 가능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제품 자체에 투명성을 구현하면서도 물류 및 생산 프로세스 자동화와 같은 프로세스 개선 노력은 생산성 강화, 효율성 강화,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업에서는 안전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거래를 기록하는 디지털 원장인 블록체인을 사용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역과 물류 플랫폼에서 활용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 또한 공급망 투명성을 높이는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투명성 구현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공급업체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명확한 의사소통, 방문 등 오프라인 확인,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뿐만 아니라 공급업체가 환경 기준, 노동기준, 폐기물 배출, 품질 관리 등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명성과 비즈니스 윤리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 전체의 프로세스 개선과 정보 공개 등 많은 부분이 필요로 하지만 투명성과 비즈니스 윤리가 왜 중요한지 공급망 전체의 기업 임원진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공급망 내 모든 기업 내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노력해야만 합니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 내에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의 윤리적 소싱, 규정 준수, 합법적인 노동 규범 등의 이론적 내용 외에도 타 기업 모범 사례 소개로 교육의 만족도와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투명성을 완벽하게 달성하는 것은 공급망의 복잡한 네트워크, 이해관계, 나라마다 차별화되어 있는 규제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무척 어렵습니다. 더욱이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새로운 기술도 요구가 되어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유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망 투명성 개선을 위한 ESG에 대한 지출은 비용이 아니라 향후 미래 공급망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고려하고 추진하는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례돋보기

공급망 관리 우수 사례

공급망 실사(Supply Chain Due Diligence)는 기업이 자사와 자회사,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법령에서 정의하는 규제 대상 기업(매출액, 고용 인력, 상장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영향까지 포함한다.

2024년 7월 7일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이 발효됨에 따라 EU의 회원국들은 2년 내 이를 반영한 국내법을 제정해야 한다.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급망 실사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공급망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사례 돋보기에서는 HMM과 바이어스도르프(Beiersdorf AG)의 공급망 관리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HMM은 국내 해운기업으로 ESG 경영 우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바이어스도르프는 2023년부터 공급망 실사법을 시행하는 독일의 기업 중 하나다.

1. HMM

해운물류산업은 환경 규제와 ESG 규제의 주요 대상이며,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에 핵심적인 고려사항이다. HMM은 국내 해운기업으로 올해 글로벌 ESG 평가기관 에코바디스(EcoVadis)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플래티넘 등급을 받았다. HMM은 환경 분야 성과 외에도 HMM과 협업하는 기업들에 대한 평가, 실사, 사전 리스크 분석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HMM은 모든 협력사에 대해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ESG 리스크 관리를 위한 평가 체계와 관리 정책을 마련했다. 2024년부터는 새로운 기준으로 성과를 관리할 계획이며, 6월에는 'HMM 공급망 ESG 관리 정책'을 제정해 ESG 관련 용어, 관리범위, 절차 및 정책을 규정했다. HMM의 공급망 ESG 관리 절차는 리스크 관리, 평가, 실사로 이루어진다.

〈HMM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체계〉

출처: 2023 HMM ESG 보고서

위의 그림과 같이 HMM은 공급망 리스크를 (거래관계) 사전·사후로 나누어 연간 2회 평가한다. 사전 리스크 평가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구매 정책 및 지침을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프로세스를 따른다. HMM은 협력사의 ESG 관리 강화를 위해 표준 계약서를 개정하고, 계약 시 협력사의 환경경영 및 사회책임경영 방침 동의서를 추가하여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다.

사후 리스크 평가는 인권, 노동, 안전, 보건, 환경 보호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ESG 요소를 고려하여 시행된다. 2023년 ESG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 대상은 구매 금액 기준 상위 80%의 업체로, 분기별로 평가를 진행했다. HMM은 이를 통해 파트너 업체의 ESG 수준을 점검하고,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며, 우수 협력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성과가 저조한 업체에는 시정 조치를 권고한다.

HMM은 ESG 경영 평가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공급망 ESG 평가 프로세스를 고도화하여 실제적 및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HMM 협력업체 기준 및 ESG 평가 구성〉

HMM의 주요 공급사 기준

구매 항목별 연간 구매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협력회사			
Category 1	Category 2	Category 3	Category 4
연료유 윤활유 선박기자재	보험 법률	조선소 입거 수리	Charter Broker

*2024부터 공급망 ESG 관리 개상 구매 Category를 14개로 확장할 예정

공급사 ESG 평가 구성

환경	인권 / 노동	지속가능한 구매	윤리경영
① 온실가스 • 감축 목표 • 신재생 에너지 사용 여부 • CO2 사용량 측정 여부 • 온실가스 측정 방법 등 ② 환경관련 인증 • ISO14001, 50001등 ③ 에너지 사용량 • 연료, 전기	① 사업장 안전보건 방침 • 건강/안전교육 제공 • 상기 관련 인증 ② 환경관련 인증 • 근로시간, 재해건 수 • 인권관련 정책 보유 • 다양성 및 차별 금지 • 사회적 포용 정책 등 ③ 인재개발 정책 ④ 노조 관련 규정	① 친환경 구매 정책 • 친환경 이행 계획 • 친환경 구매 실적 ② 공급업체 행동 규범 • 인권 및 노동 • 안전 및 보건 • 환경보호 등	① 윤리 경영 관련 방침 • 행동강령 여부 • 내부고발자 시스템 • 고객정보 보호 절차 등 ② 윤리 관련 교육 ③ 윤리 이슈 제보 현황

출처: 2023 HMM ESG 보고서

또한 협력사의 ESG경영 실천을 지원하는 'HMM 공급사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계약 관계를 수립할 때 협력사로 하여금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서약하며, HMM이 추구하는 인권/노동, 안전보건, 환경보호, 윤리경영의 가치를 협력사와 공유한다.

한편, HMM은 이해관계자의 반부패를 다음과 같이 점검한다. 뇌물수수를 한 기록이 있거나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와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협력사가 뇌물 및 부패방지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당사의 부패방지지침 준수를 요구한다. HMM은 협력사의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협력사에 뇌물수수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는 조항을 계약서 내 삽입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회사가 3자 대리인을 통해 공무원과 거래하는 경우 부패방지지침에 따라 실사를 실시한다.

2. 바이어스도르프(Beiersdorf AG)

바이어스도르프(Beiersdorf AG)는 독일 함부르크에 본사를 둔 스킨케어 기업으로, 화장품 브랜드 니베아(Nivea)의 제조사다. 바이어스도르프는 현재 100개국 이상에서 약 2만1천 개의 공급업체로부터 원자재와 포장재 등을 공급받고 있다.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운영하는 바이어스도르프는 공급망 전반의 협력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비즈니스를 수행하며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행동강령은 부패, 아동 노동, 강제 노동 및 차별 금지와 직업 건강, 안전, 결사의 자유, 단체 협상 권리 및 환경 보호를 규정한다. 연간 거래 규모가 5만 유로 이상인 협력사로부터는 '행동강령 준수 확인서'를 받고 있다. 2023년 발효된 독일의 새로운 공급망 실사법(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에 맞춰 2022년에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바이어스도프르의 행동강령 중 반부패와 관련된 내용과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사에 요구하는 부분을 예시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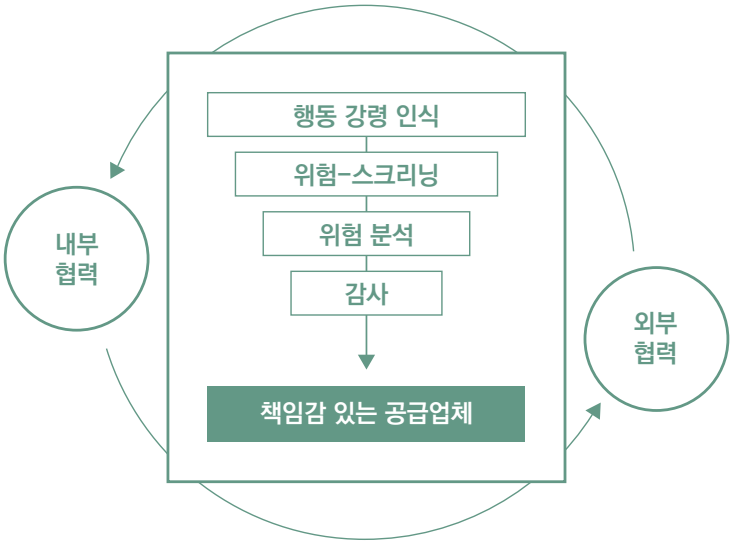
〈바이어스도르프의 행동강령 발췌〉

분야	세부조항
4. 비즈니스 정직성	4.1 부패방지: 협박, 뇌물 수수 및 기타 불법 행위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패 또는 부패 시도는 용납되지 않으며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협력사(business partner)는 사업을 획득 또는 유지하거나 기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뇌물 또는 기타 불법적인 인센티브나 보상을 직간접적으로 제공, 약속, 보장, 요구 또는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어떠한 유인책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협력사에게 뇌물이나 기타 부당한 이득을 요구하거나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5. 경영 접근법	– 협력사는 본 행동강령에 정의된 기준을 수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본 행동강령에 명시된 모든 관련 법률 및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관리 시스템을 구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해상충을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가 포함됩니다. 공급망에 속한 직원, 공급업체 및 하청업체는 본 행동강령의 내용 및/또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률에 대해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 본 행동강령 또는 국내 및 국제 법령에서 발생하는 의무는 계약, 적극적으로 직원을 오도하는 행위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통해 회피할 수 없습니다. – 협력사는 본 행동강령 및 국내/국제 법령의 준수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바이어스도르프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사용하여 본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본 행동강령 준수와 관련된 협력사의 기록 검토, 제3자 지속가능성 평가 또는 제3자 지속가능성 감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바이어스도르프는 파트너십의 정신에 따라 협력사가 본 행동강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협력사가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주소(procurement.sustainability@beiersdorf.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Beiersdorf, PRINCIPLES FOR BUSINESS RELATIONS(CoC for Business Partners)

이 밖에도 협력사가 행동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바이어스도르프는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거래를 종료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노동 또는 비인도적인 근무 조건 등 행동강령을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예고 없이 감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바이어스도르프 홈페이지에 따르면 협력사가 행동강령에 서명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파트너를 통해 조달량의 약 90%를 확보하고 있다.

〈바이어스도르프의 협력사 행동강령 구현 프로세스〉



출처: 바이어스도르프 홈페이지(KOTRA 해석본)| https://me2.do/GNvG39fs

바이어스도르프는 책임감 있는 협력사 선정을 위해 신규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 초기 위험 분석을 시행한다. 이 분석은 산업 위험, 국가 위험, 개별 협력사의 위험(예: 바이어스도르프에 대한 경제적 중요성)을 포함하며, 위험이 클수록 더 포괄적인 분석을 진행한다. 특정 위험 범주 이상의 협력사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 플랫폼인 에코바디스(EcoVadis)에서 평가받도록 요구한다. 위험 분석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업체가 SMETA(the Sedex Members Ethical Trade Audit)[1]의 4가지 모듈에 따른 윤리 감사가 필요한지 결정한다. 감사가 필요하면 인증된 외부 기관을 통해 수행하고, 시정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수립하고 이행을 지원한다. 또한 공급업체와 협력사가 지속가능성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e-러닝 포털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1) 글로벌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하는 비영리 조직 Sedex에서 개발한 윤리 감사 절차로, 2개 혹은 4개의 모듈(안전 보건 / 인권 노동 / 환경(선택 사항)/비즈니스 윤리(선택 사항))에 따라 감사가 진행된다.

참고

- HMM, 2023 HMM ESG 보고서
  https://www.hmm21.com/data_files/company/files/download/HMM_ESG_Report_2023(KOR).pdf
- HMM 공급사 행동강령 | https://www.hmm21.com/company/esg/sustainability.do
- HMM 공급망 ESG 관리방침(2024.6.28) | https://www.hmm21.com/company/esg/sustainability.do
- HMM 공급망 ESG 관리정책(2024.6.25) | https://www.hmm21.com/company/esg/sustainability.do
- Beiersdorf, PRINCIPLES FOR BUSINESS RELATIONS(Code of Conduct for Business Partners (CoC))
- 바이어스도르프 홈페이지
  https://www.beiersdorf.com/sustainability/society/employees-along-our-entire-value-chain/responsibility-in-the-supply-chain
- Kotra 해외시장뉴스, “독일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법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2023.07.17)
  https://me2.do/GNvG39fs
- 머니 투데이, “HMM, 에코바디스 ESG 평가서 '상위 1%' 플래티넘 등급 획득” (2024.5.7)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50710115133037
- Fortunekorea, “HMM, 신규 공급망 탄소계산기 개발…'그린 세일링' 본격화”(2024.1.3)
  https://www.fortun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68
- 이데일리, "[기고]격변기 맞은 글로벌 해운물류"(2024.4.22)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03766638858744&mediaCodeNo=257&OutLnkChk=Y

글로벌 공급망의 청렴성 강화

보고서리뷰

■ 보고서: Alliance for Integrity, Fostering Integrity in Global Supply Chains(2023.07)

공급망의 인권, 환경 리스크는 부패 리스크와 상호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리스크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보고서는 이러한 리스크 간의 상호작용과 이를 고려한 통합적 접근을 위한 가이드를 소개한다. 기업의 담당자들은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해당 보고서를 참고해 볼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데 약 13-16분이 소요됩니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에 따라 실사 의무기업은 인권과 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실사해야 한다. 이 지침의 세부항목은 부속서 파트 1, 2에 명시되어 있다. 파트 1은 국제 인권 조약과 인권 및 기본권에 관한 규약을 다루고 있으며, 파트 2는 환경협약에 포함된 금지 및 의무사항을 설명한다. 의무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에 명시된 인권 및 환경 예〉

인권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개인의 명예·평판에 대한 불법적 비난 금지, 개인 사생활·가정·주거 등에 대해 자의적 또는 불법적 간섭 행위 금지, 정당한 근로조건의 보장, 근로자가 사택에 거주하는 경우 적절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식량·의복·식수·위생에 대한 제한 금지, 아동권 보호, 결사의 자유, 집회 및 단체교섭에 대한 권리 보장 등
환경	유해한 토양 변화, 과도한 물 소비,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지 황폐화, 삼림벌채 등 환경 훼손 금지, 생물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방지 또는 최소화, 수은 폐기물의 불법적 처리 금지,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재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방지, 해양 환경 오염 방지 등

출처: KOTRA, 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Q&A: 알기 쉬운 EU 통상 정책 시리즈(2024.7.4)

한편, 민간 부문의 투명성, 청렴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중심의 다중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인 'Alliance for Integrity'가 발간한 보고서 'Fostering Integrity in Global Supply Chains (2023.07)'에 따르면 공급망 실사에서 중요시되는 인권과 환경분야는 반부패 정책 및 관행과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공급망 관리 프로세스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리스크 간 상호작용을 고려할 때, 기존의 개별적인 리스크 관리방식보다는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보고서는 통합적인 공급망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단계별 구축 가이드를 소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적인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기업은 환경, 인권, 부패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해결하고 공급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해외 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은 공급망 법률 동향과 현지 지식을 활용하면 리스크 해결 방안을 개선하고, 글로벌 브랜드가 효과적인 리스크 해결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공급망 내 문제를 파악하고 관리 및 해결하려는 담당자는 이 보고서를 통해 통합적인 방식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급망을 관리할 수 있는지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청렴성 강화 및 통합적 리스크 관리

(공급망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공급망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이로 인해 다양한 리스크가 증가한다. 글로벌 기업은 비용 상승, 물류 장벽, 정치 위험, 경제 불안정성 등 다양한 물리적, 재정적, 사회경제적 장벽에 직면해 있으며, 윤리적 생산과 공급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증가와 임팩트 투자자의 등장으로 공급업체가 환경과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글로벌 소싱을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기업의 공급망 관리에 대한 법적 및 규제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책임있는 비즈니스 관행과 윤리적 행동에 대한 규제는 연성법(soft law)에서 경성법(hard law)으로 전환되고 있어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법·규범화) 2023년 1월 발표된 독일 기업 실사 의무에 관한 법률(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새로운 법률이 도입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원칙(UNGP)',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법률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소싱하는 기업에게 간접공급업체의 인권, 환경, 부패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예방, 관리, 개선 활동에 대한 보고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책임도 커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020년에 미국 법무부(DOJ)와 증권거래위원회(SEC) 발행한 FCPA 가이드[2]에 따르면, 더 이상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운영만으로는 형량 감경 및 관용을 고려하는데 충분하지 않으며, 규정준수 프로그램이 '효과적'임을 입증해야 한다.

(통합적 리스크 관리 필요성) 한편, 부패와 인권은 환경 권리 및 보호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부패는 국가 차원의 통제 및 예방 메커니즘을 약화하고,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는 길을 차단함으로써

2) 원문: in the 2020 resource guide published by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DOJ) and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SEC)

인권 침해 가능성과 심각성을 증가시킨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패, 환경 착취, 인권 침해는 종종 함께 발생하고 진행되며, 이러한 특징은 기업이 잠재적 문제를 더 잘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삼림벌채를 방지하는 법적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로 인해 집행력이 약해지면, 삼림벌채가 계속될 수 있으며, 부패로 인해 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농부들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거나 아동 노동이 허용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통합 공급망 관리 시스템 구축 가이드

보고서는 기업이 공급망의 잠재적 위험과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 및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의 5단계를 제시한다.

단계	고려 사항
배경위험 (background risks) 매핑	- **리스크 매핑이란 무엇인가?** 기업이 노출된 주요 리스크 요소를 파악하고, 리스크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리스크의 심각성,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 **리스크 매핑의 이점은 무엇인가?** 리스크 매핑을 통해 다양한 리스크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예방 및 완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 **어떤 외부 조직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정부, NGO, 지역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야 하며, 이들과의 소통을 통해 리스크 관리의 외부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통합된 내부 구조 구축	- **내부 핵심 인력은 누구인가?** 환경, 인권, 부패 등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부서의 리더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합된 리더십 팀이 핵심 인력이다. 각 부서 간 협력을 촉진하고, 자원과 정보를 공유한다. - **어떤 조직 구조가 필요한가?**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서 간 협력과 자원 공유를 강화하는 통합 관리 구조가 필요하다.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리스크 검토 회의를 통해 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가?** 리스크 관리 성과에 대한 명확한 KPI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부서와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통합 리스크 관리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

데이터, 알림 및 조치 통합	- **리스크 입력(risk input)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정의하고, 이를 통합된 시스템에 입력하여 다른 리스크들과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게 연결한다. - **통합 알림(alert)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는가?** 통합 알림은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잠재적 문제가 감지될 때 자동으로 각 관련 부서에 경고를 보내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진다. - **어떠한 기술이 접목될 수 있는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술을 통해 서로 다른 리스크의 상호작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동 알림 시스템으로 즉각적인 대응을 유도할 수 있다. - **문제는 어떻게 제기되는가?** 제기된 문제는 자동 알림 시스템을 통해 관련 부서에 보고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정 조치가 취해진다. - **알림 이후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가?** 경고 신호(red flag)가 발생하면 각 부서는 즉각적으로 대응 계획을 실행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리스크를 관리하거나 시정 조치를 취한다.
공급업체와의 협력	- **공급업체가 직면한 리스크에 대한 어떤 정보가 거래사에 공유되어야 하는가?** 공급업체는 구매자에게 자신들이 직면한 리스크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여 전체 공급망의 리스크 관리에 기여한다. - **장기적인 구매 관계를 통해 양측 모두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는가?** 장기적인 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공급업체와 구매자 모두가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기업은 어떻게 공급업체에 리스크 문제에 대해 의미있게 지원할 수 있는가?** 기업은 공급업체에게 책임 경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기술적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여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영향력 확대를 위한 공동 행동	- **공동 행동은 기업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더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공동 행동은 어떻게 자원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리스크 관리 이니셔티브를 추진함으로써 각 기업이 개별적으로 자원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절감할 수 있다. - **공동 행동은 복잡한 공급망과 더 넓은 사회에서 행동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가?** 공동 행동을 통해 산업 전체가 책임 있는 비즈니스 관행을 촉진하고, 더 넓은 사회적, 환경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변화를 추진할 수 있다.

참고

• Alliance for Integrity, Fostering Integrity in Global Supply Chains (2023.07)
• KOTRA, 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Q&A: 알기 쉬운 EU 통상 정책 시리즈(2024.7.4)

행동하는
윤리경영

공급망 속 기업의 ESG 경영 체크리스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발간한 'EU 공급망 실사 지침 Q&A북'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EU공급망 실사지침의 간접적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의 보고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ESG경영안내서'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자가진단 지표들과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실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어떻게 ESG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지 점검할 질문들과 단계별 실천 방법을 알아보자. (이 글을 읽는 데 약 5-10분이 소요됩니다.)

중소기업은 EU공급망 실사 지침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실사 의무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다면 간접적으로 실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대기업의 자회사 및 협력사들은 공시 의무는 없으나, 실사 대상 기업의 행동 강령 및 계약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 보증(contractual assurances)을 체결할 수 있다. EU는 실사 의무기업이 모든 협력사를 직접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협력사로부터 계약상 보증을 받아 기업의 행동강령과 예방 조치를 준수하겠다는 일종의 약속을 받도록 한다. 이 보증은 실사 의무기업의 '직접적인 협력사'로부터 받으며, 1차 공급사가 하위 공급사와 상응하는 계약을 맺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실사를 이행한다. 필요시 간접 협력사들과도 직접 계약상 보증을 맺을 수 있다. 기업은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의 심각한 위반이 지속될 경우 최후의 수단(as a last resort)으로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이처럼 향후 공급망 실사 요구는 중소기업 ESG 경영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중소기업이 ESG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관련 가이드들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거버넌스(G) 자가진단 및 실행

중소벤처기업부는 ESG 자가진단 지표를 제공한다. 이는 기업 규모에 따라 기본 및 심화지표가 적용되는데,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기업은 기본 지표와 심화 지표 모두 응답해야 하는 반면,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은 기본 지표만 응답하고, 심화 지표에 대한 응답은 자율적 선택사항이다. 거버넌스 영역에서 필수적으로 점검되어야 할 기본지표로는 윤리경영 정책, 준법경영시스템 구축, 법규준수 및 위험관리, 하도급업체와 공정계약 이행, 경영진의 ESG역량개발, 윤리법규 준수가 있다.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ESG경영안내서는 위 지표들을 점검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단계적 실천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일부 발췌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윤리경영 정책: 윤리경영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Yes□ / No□

윤리경영 정책은 기업이 경제적,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념에 따른 윤리적 책임까지 이행하기 위해 수립한 방침이다. 윤리헌장 및 실천 규범의 제정은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관련 모든 구성원이 이를 준수하게 한다. 글로벌 대기업은 윤리 정책을 제정하여 협력사에게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협력사는 거래 유지를 위해 원사업자로부터 윤리준수 서약서나 청렴거래이행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윤리헌장과 실천규범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Step 1. 윤리경영 원칙 수립	- 기업의 일반적인 윤리 준수 의지를 담은 윤리경영 원칙을 수립
Step 2. 규제 동향 및 윤리 위험 진단	- 윤리경영 관련 제도 및 규제 동향을 파악 - 기업의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파악하고, 발생한 혹은 발생가능성이 있는 윤리경영 이슈를 조사
Step 3. 정책 및 지침 수립	- 자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윤리경영 이행에 필요한 세부 정책을 수립
Step 4. 윤리 경영 의지 공유	- 윤리경영 준수 의지 및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문서화하여 자사 홈페이지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공개

준법경영시스템 구축: 법규준수를 위한 담당자를 보유하고 윤리 규정을 문서화하고 있습니까? Yes□ / No□

회사는 법규 준수와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이나 담당자를 지정해 재무, 회계, 감사, 지적재산 보호 등의 내부통제를 상시 점검한다.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과 정보를 보고할 담당자를 지정하고, 내부통제 규정과 징계 절차를 문서화해 준법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부패로 인한 법적, 영업적, 평판상의 손해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담당자와 조직을 지정하고 관련 규정을 문서화해 운영해야 한다.

Step 1. **전담 조직 운영**	-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Step 2. **리스크 식별**	-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과 행위를 파악
Step 3. **관련 규정의 수립**	- 경영진이 승인한 회사의 윤리 및 법규 준수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전 사업장에 현지언어로 게시(노동, 안전보건, 환경 등의 내용을 함께 포함 가능) - 행동 규범 및 윤리 강령 등 제정, 모든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회사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 정책문을 사업장내 또는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 - 유관 법령에 대한 내부 정책 문서를 주기적으로 제·개정하여 내부통제 기준, 절차, 운용 방식 점검 및 평가 - 일반적으로 위반에 따른 징계절차는 인사정책 및 취업규칙을 따름

하도급업체와 공정계약 이행: 하도급 거래 시 공정계약 이행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Yes□ / No□

공정거래는 거래 당사자 간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도급 거래는 원사업자가 받은 업무를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로, 중소·중견기업 보호를 위해 단순 도급계약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맞추고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권장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법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공한다.

Step 1. **관련 법령 이해**	- 하도급법에 따라 행정제재 처분이 주로 발생하는 사례로 하도급계약서의 작성, 공사대금 지급보증, 대금직접지급, 대금지연이자, 대금 조정 반드시 준수
Step 2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 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을 확인하여 누락 방지 - 선급금, 기성금, 조정액 등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 및 기일, 위탁일, 납품일시 및 장소, 목적물, 목적물의 검사 방법 및 시기,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및 방법 등

윤리법규 준수: 귀사는 최근 3년 내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법규 위반 내역이 있습니까? Yes□ / No□

기업은 경영진 및 임직원이 부패 및 비윤리적 행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주요 법규에는 국제법과 반부패 관련 법, 형법 등이 포함된다. 윤리 법규 위반 시 확정된 형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 검토하며, 이러한 위반은 비용 손실과 평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법적 대응과 개선 계획을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고, 개선 방안과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Step 1. **관련 법령 이해 및 리스크 식별**	- 기업의 사업의 이행과정에 준수해야 할 법·규제에 대한 요구사항을 식별 - 주요 글로벌 반부패 법규 및 스탠다드를 참고, 국내외 공무원과 거래 관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업상 이익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에 대한 기준과 한도를 수립 - 식사 및 선물, 경조금, 편의 제공에 대한 한도와 빈도를 제한하고 금지 항목에 대하여 나열하고, 경영진 및 임직원에게 공유
Step 2 **내부통제 이행**	- 유관 법령에 대한 내부 정책 문서를 주기적으로 제·개정하여 내부통제 기준, 절차, 운용 방식 점검 및 평가 - 준법 지원 인력 또는 조직을 운영하여 위반 사항 점검 및 예방조치 시행
Step 3. **위반사항 점검 및 예방**	- 기업은 윤리 법/규제 위반 건수 및 처벌 수위를 기준으로 성과 점검 및 재발 방지 방안 수립 - 임직원에게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교육·홍보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이행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ESG경영안내서(공급망편)(2024.2.1)
• KOTRA, 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Q&A: 알기 쉬운 EU 통상 정책 시리즈(2024.7.4)

문화 속
기업윤리

일에도 존엄성이 필요한가

영화 '다음 소희'

*이미지 출처: 네이버 영화

고등학교 3학년인 소희는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대기업 협력사에 취직한다. '사무직 여직원'을 기대한 소희는 면접도 없이 통신사 콜센터 상담원으로 취업이 확정된다. 간단한 교육 후 곧바로 업무에 투입이 되고, 욕설과 성희롱이 난무하는 고객 전화를 '방어'하면서 정신적으로는 피폐해져 간다. 고객의 통신서비스 탈퇴를 막아내는 것이 성과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는 수습사원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에 따라 무용지물일 뿐이다. 이 회사는 어린 나이의 직원을 수습형태로 계약하여 공정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을 일삼는다.

소희에게 일자리를 소개할 때에도 '대기업이고, 하청이라도 다같은 하청이 아니라'고 너스레를 떨었던 담임 선생님은 직장은 다 그러니 참고 다니라고 달랠 뿐이다. 이제 갓 사회로 나온 소희에게 벅차고, 억울하기만한 이 근무환경에서 어느 누구도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한다. 영화는 소희의 일자리가 점차 비극의 공간이 되어가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1999년 세계노동기구(ILO)는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생산적이고 공정한 소득을 가져다주는 기회를 수반하며, 안전한 일터뿐 아니라 개인의 발전을 위한 보다 큰 가능성을 제공하는 일자리'라고 정의하고 있다(오수현, 2017).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는 소희의 일자리 현실과는 거리가 멀기만 하다. 어린 세대가 겪어야 할 불합리함이 소희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사회 공동이 책임이 되어야 함을 영화는 시사한다.

참고

• 오수현(2017), 한국국제협력단, '품위 있는 일자리(decent work)'의 논의 동향이 우리 원조에게 주는 시사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동향

뉴스클립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올해 2분기 보상금 10억9천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2분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 110명에게 보상금 약 10억9천만 원을 지급했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119억원에 달한다. 올해 2분기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10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44건, 41%) ▲고용(29건, 27%) ▲산업(20건, 19%) 순이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3억8천여만 원, 35%) ▲고용(3억여만 원, 28%) ▲연구개발(1억6천여만 원, 15%) ▲복지(1억3천여만 원, 12%) 순이었다. 산업분야의 경우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첨단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금 부정수급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최초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없거나 결정된 보상금의 50% 미만이어서 보상금이 일부만 지급된 건들에 대해 별도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도 반기별로 각급 기관에 신고로 인한 수입 회복 현황을 확인하여 보상금을 선제적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 이번 2분기에도 보상금의 일부만 지급했던 사건의 수입 회복 증가를 확인하여 신고자 29명에게 총 1억여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보상금, 포상금 등 신고자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7월 18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74978

국민권익위, 8월 27일부터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5만원으로 상향 적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2024년 8월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8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27에 공포·시행되면서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어 오는 상황에서,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하여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도 계속되어 왔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현재 평상시 15만원, 설날·추석 선물기간 동안은 그 두 배인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이번 추석은 9월 17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8월 20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76885

국내외 동향

美 주주들, '거버넌스' 변화 목소리 커졌다

올해 상반기 미국 기업의 주주들은 ESG, 즉 환경(E)과 사회(S)와 지배구조(G) 중에서 지배구조와 관련된 변화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펌인 프레시필즈(Freshfields)가 주총에서 승인된 안건과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새로운 ESG 정책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주주들은 환경과 사회보다 지배구조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제안에 훨씬 더 많은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1일부터 6월 14일 사이에 주주총회 표결에 부쳐진 154건의 지배구조 변화 안건 중 38건이 가결되면서 가결률은 약 25%를 보였는데, 이 같은 가결률은 환경과 사회 변화와 관련된 제안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라는 게 프레시필즈의 설명이다. 지배구조 변화와 관련된 안건 중 통과 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 회사의 중요한 조치에 대해 주주의 3분의 2나 4분의 3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초다수의결(supermajority) 요건을 줄이자는 요구였다. 또 모든 이사가 매년 재선에 출마하거나 주주가 특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요구하는 안도 통과된 경우가 많았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이슈에 대한 주주들의 지지에 차이가 보이는 건 지배구조 관련 이슈가 다른 두 분야 이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적 감시를 덜 받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다른 미국 로펌인 크라벳, 스웨인&무어의 기업 지배구조 전문 변호사 마이클 아놀드는 "지배구조 변화 관련 제안은 지나치게 규범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최근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ESG에 대한 반발과도 무관하므로 더 광범위한 지지층을 확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 ESG경제 2024년 8월 13일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7515
- 임팩트 온 2024년 8월 21일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372

영국 항소법원 판결, 공급망의 불법성에 대한 영국 범죄수익법 적용 가능성

영국 항소법원은 6월 27일 영국 국가범죄청(NCA, National Crime Agency)이 중국산 위구르족 강제노동 면화 수입에 대한 조사를 거부한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2024년 6월 27일 영국 항소법원은 국가범죄수사청(NCA)이 중국에서 제조된 면제품이 강제 노동의 산물인지 조사하지 않은 결정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세계 위구르 의회(WUC)가 NCA의 조사 미실시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고등법원은 2023년 1월 WUC의 주장을 기각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뒤집고 조사 여부를 NCA에 재검토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결은 공급망 내 불법 행위가 자금 세탁 혐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으며, 관련 조사가 낮은 기준에서도 실시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제조된 면제품이 영국으로 수출되는 과정에서 강제 노동 문제를 조사하지 않은 영국 당국에 대해 WUC가 제기한 법적 소송이 있다. WUC는 영국 당국에 강제 노동과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당한 증거를 제공했지만, 고등법원은 2023년에 그 요구를 기각했다. 항소법원은 NCA가 면제품 수입을 조사하지 않은 결정이 법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수사 착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공급망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자금 세탁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회사들이 강제 노동으로 제조된 제품을 거래할 경우 법적 책임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 Skadden 2024년 7월 8일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4/06/06/LHIOSJHTP5BXTPH6BGQHVNTJYA/
- The Guardian 2024년 6월 27일 https://www.theguardian.com/uk-news/article/2024/jun/27/forced-uyghur-labour-imports-nca

거버넌스 핵심지표 준수율, 상장사 규모별 편차 커

삼일PwC 거버넌스센터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상장기업의 기업 지배구조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이 지난해(62%)보다 하락한 절반(5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심지표 준수율은 상장사 규모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자산 5천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상장사의 준수율이 36%에 그쳤고, 자산 2조 원 이상 준수율은 63%였다. 보고서는 지난 5월 말까지 공시된 자산 5천억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비금융업) 488곳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하고, 핵심지표 준수 현황과 주목해야 할 시사점을 소개한다. 올해부터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주와 이사회, 감사기구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한 15개 핵심지표 준수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 핵심지표 준수율은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이다. 규모 별로 살펴보면 지난 4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던 2조 원 이상 기업의 핵심지표 준수율이 올해 처음 감소했다.

보고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핵심지표 준수율이 악화한 것은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핵심지표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지난해까지 준수율이 가장 높았던 지표 2개가 빠지고, 이번에 신규 추가된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항목과 변경된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여부’ 항목의 준수율이 저조한 영향이 컸다. 하지만 신규 및 변경 지표를 제외해도 평균 준수율은 전년 대비 1%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장은 “핵심지표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업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지속해서 준수율이 낮은 항목은 원인 분석과 함께 해당 지표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되 회사 상황에 맞는 대안적인 지배구조 장치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아시아경제 2024년 7월 16일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71609051615607

산업부, APEC회의서 '지속가능 공급망' 제안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26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투자위원회(CTI3) 및 산하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디지털 경제와 인공지능(AI)' 등 역내 협력을 위한 사업을 제안,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 사업을 통해 APEC 역내에 지속가능한 공급망 형성을 위한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작년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 측이 강조한 역내 디지털 질서 선도,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등 APEC 역내 AI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부는 "2040년까지 APEC 역내 회원국들이 달성할 푸트라자야 비전을 우리의 통상 이익에 부합시키고,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환경, 공급망, 디지털 등 역내 주요 통상 의제와 관련한 실질적 협력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푸트라자야 비전은 ▲ 무역·투자 ▲ 혁신·디지털경제 ▲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등 분야에서 회원국 간 협력을 심화해 역내 공동 번영을 추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연합뉴스 2024년 8월 25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0825014000003?input=1195m

공급망 매핑

웹툰

*참고: KOTRA, 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Q&A : 알기 쉬운 EU 통상 정책 시리즈(2024.07.04)

행사소식

2024 옥스팜 x 임팩트온 ESG 컨퍼런스

옥스팜과 ESG 전문 미디어 임팩트온이 개최하는 컨퍼런스로 국제사회 동향 및 인권 리스크 관리 전략 등을 다루며, 한국 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인권 경영,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를 위한 진단과 제언을 나눈다.

주최 옥스팜, 임팩트온
일정 2024년 9월 5일(목)
장소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
참고 https://docs.google.com/forms/d/1180UwePoNb6ikaUli6SEolBfXPKbvEyNRI4KaqnbhEA/viewform?edit_requested=true

2024 그린에너텍 ESG 컨퍼런스

"기후변화에 맞선 우리의 길"을 주제로 건설 산업과 모든 산업 분야에서 탄소중립과 친환경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규제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ESG 평가와 인증을 통한 지속가능 경영의 중요성을 다루는 컨퍼런스.

주최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주식회사지엠이지
일정 2024년 10월 30(수)~11월 1일(금)
장소 인천 송도 컨벤시아 전시장 내 컨퍼런스장
참고 https://www.greenenertec.com/REESGConference

독자 의견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9월호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독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더 나은 콘텐츠로 개선하려 합니다.
아래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남겨주시면 5명을 추첨하여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① 이번호에서 다룬 주제 또는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②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셨나요(또는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요)?
③ 기타 의견(다뤘으면 하는 주제, 기업 사례 등)

2024년 9월 20일(금)까지
(1) '의견남기기'페이지(https://quiz.assist.ac.kr)에서 응답하시거나
(2)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korea@assist.ac.kr) 앞으로
의견과 성함,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세요.
*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 발송을 위한 정보로만 활용되며, 추첨 이후 파기됩니다.

귀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기프티콘 추첨에 선정되신 분들은

고○정님, **김○현**님, **표○현**님, **임○희**님, **김○승**님입니다.

민원상담 신청부터 결과확인까지 온라인으로 한번에 끝내기

법령·제도·행정 등 민원상담은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① 상담신청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안내
② 상담관지정	민원 내용에 따른 상담관 지정
③ 사실관계조사	관계 법령 검토 및 자료조사로 사실관계 확인
④ 결과확인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 신청결과